민주 김병주 의원 "첩보문서 삭제권한, 軍에게 있다"

열람 범위 조정하며 벌어진 해프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위원.

현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관련
삭제된 문서, 軍 운영 밈스에 있던 것
"국정원에서는 삭제할 수가 없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고발했는데 실제로는 삭제 권한은 박 전 원장이 아닌 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금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이 이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가 담긴 보고서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국정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6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서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초반에 (보고할 내용이) 없나 하는 의문이 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박 전 원장은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해도 지시할 바보 원장도 아니고,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론했다.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 문서는 군이 관할한다.

군은 내부 검토 차원에서 문서 열람 권한을 정리한 것일 뿐 문서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 전 원장은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밈스 체계가 수백대가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니 아마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은폐하려면 원본을 삭제해야 되는데 합참과 777 부대는 원본을 삭제한 적이 없다"며 "좀 민감한 사안이니 관련이 없는 부서나 관련이 없는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과정에서 온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의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피살 공무원 첩보 삭제' 고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삭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내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한다.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 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올라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된다"며 "현재 개혁된 국정원을 모르는 과거의 직원들이 몇 사람 간부로 들어왔다더라. (그들이 고발이란) 이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내부 감찰에서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전직 원장, 직원도 반드시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며 "나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전화 한 마디도 없이 검찰에 고발한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틀렸고 전직 국정원장, 바로 직전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도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단속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입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은 보안 의식이 저보다 더 철저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은 지극히 제한되는 것이다. 생산된, 첩보 생산 부처가 있는데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만약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첩보를 생산한 거기에 (원자료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겠나"라고 했다.

원 첩보를 어디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법상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다. 한미 정보 동맹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했다.

피살 공무원이 북한군에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며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기록을 삭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그것은 국방위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됐든 그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건 사실이다. 저도 그 얘기했다"며 "얘기하고 왜 삭제하느냐"고 반박했다. /뉴시스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들과 심민 임실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임실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열렸다.

민주, 국정원 고발 · 전 정권 인사 사퇴압박 '강력 대응'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이 없었다… 명백한 정치 행위"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 정부 향한 대대적인 친북 몰이"
오영환 원내대변인 "당 차원서 모든 대응 다 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전 정권에 대한 압박을 키워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건과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 부분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까지 시사했다. 전 정부에 대한 '친북 몰이'를 통해 지지율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고발건에 대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이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국정원의 고발건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가 본격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으라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국가가 아닌 사람에 충성하는 어두운 국정원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치 않던 더럽혀진 이름의 역사, 망나니 칼자루로 국정원이 전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서훈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등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 정부가 해당 공무원이 살아있음을 인지하고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내 관련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건영 의원은 "근거도 없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월북 추정 판단이 잘못됐다고 번복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박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군이 입수한 SI 첩보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 뿐"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 군의 월북 추청 판단을 인정했지 않나. 얼마 전 민주당 TF가 합참을 방문해 확인을 해 봤다. 그랬더니 군은 당시에 했던 월북 추정 판단을 존중하고 지금도 그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바뀐 게 없다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북한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다. 청와대에 보고됐을 때는 안타깝지만 이미 해당 공무원이 피격을 당한 후였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국방부와 해경이 만든 자료가 전부다. 어떤 자료를 삭제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진실을 밝힐 칼자루는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손에 있다. 모든 정보가 국방부와 해경에 있고, 지금 당장 열람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오늘 당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진짜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을 월북으로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는 전임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흑여라도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도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은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봤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그런 국정원 직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규정,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인사권자의 폭압적 공개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생계 수단, 자기 보전 수단, 국민 배신행위' 등의 모욕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며 "이런 식의 모욕적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아시타비(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같은 뻔뻔함"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시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임실군의회 개원식

제9대 임실군의회가 7일 개원식을 갖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5일 원 구성을 마무리한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 의원들은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국립 호국원을 참배하고,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기자실을 방문해 '임실군민께 드리는 약속'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의회 방송 개설, 민원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민간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회 내 연구회 활성화, 군민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 7개의 군민과의 약속을 담았다.

군의회는 임실 정치의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군민들의 자긍심 향상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주지검, 이상직 보석에 항고… 증거인멸 등 우려

법원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전날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항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8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시스